

## 화해, 공존, 평화의 조건: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향하여\*

박의경 (전남대학교 교수)

### 논문요약

이 글은 다양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 찾아낸 화해와 공존의 가능성과 함께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로운 미래공동체 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서양,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화해 사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 연구를 바탕으로 필자는 행위자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존의 조건 형성, 공존과 인정을 통한 평화의 달성, 평화로운 사회에서의 화해의 완성과 공존의 지속이라는 삼각 구도를 통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공동체의 상을 제시해 보고 이와 더불어 이를 위한 우리의 과제도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화해, 공존, 평화, 협력, 인정

---

\* 이 글은 2019년 통일연구원 일반과제 [남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 (1/5년차): 화해협력] 의 위탁연구과제 <동서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위탁연구기관: 한국정치사상학회)의 세부 내용 중 결론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I.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넘어

단일 민족, 하나의 역사라는데 이견을 보인 적이 없는 21세기 한국의 현실은 분열과 갈등의 상징으로서의 분단이다. 반만년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로 통일된 정치체제로 존재해 왔던 시기는 그리 길지 않고, 오히려 나뉘고 분리되어 있었던 시간에 대한 기억이 더 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의 극복을 논하고, 통일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분단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갈등의 능선을, 분열과 갈등의 현실을 넘어서 보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정파를 넘어 공감하고 있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목표는 분명하고 다르다고 할 수 없지만, 거기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북한은 통일을 주장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가치를 내세운다. 한반도에 관심 있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비롯한 주변 정세를 도외시키고 형식 논리적인 독자적 결정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면서, 미국을 등에 업은 남한이 흡수통일을 시도하고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핵무기 개발이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세계적인 비핵화 추세의 대척점에 서 있다. ICBM급 핵 무력이 완성되었다면서 자축하는 상황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가지는 국제적 성격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국제 공조와 국제적 노력을 통해서 북한을 대결에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이 여전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 집단과 그래도 한민족이니 현 상태에서라도 핵무기 동결을 거쳐 해체로 나아가자는 집단이 공존하고 있다. 분단이라는 현상의 변화를 원하면서, 자신을 축으로 하는 주변의 변화만을 고집하는 강 대 강의 대치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 문제의 모든 당사자가 자기중심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는 전통적인 국제분쟁 지역인 중근동보다 더욱 치열한 21세기 외교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통일은 우리 한민족만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한반도 분단의 해결은 전 세계의 안전보장을 위한 특급 외교 사안이자 국제적 문제인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현실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고 일종의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이라는 동일한 목표가 존재한다는 데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수 있다.<sup>1)</sup> 목표가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작은 시작으로 얻어지는 커다란 결과를 수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무기를 개발, 생산, 판매, 구입하는 자들은 모두 안전에 대한 욕구이자 평화에 대한 갈망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체제보장이고, 이제는 더 나아가 경제발전에도 대한 욕망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평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결국, 무기를 통한 힘의 과시, 대외 경쟁력 확보에 대한 열망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모순적 설명이 가능하다. 즉, 평화를 무력으로라도 사겠다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는 전쟁과 폭력을 경험한 지역과 세대가 멀리 있는 평화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면서 전개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모든 것에는 절차와 단계가 존재한다,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화로 가는 길을 찾기란 쉽지 않다. 평화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상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분란과 갈등도 그 출발점은 마음과 정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고전으로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출발선에는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과 정신이 있었다. 아테네는 그들 간의 갈등과 무질서를 최대한의 설득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남아있는 갈등은 강제적 방식을 사용하면서 공존의 질서를 모색해 온 민주주의 공동체로 알려져 있다.<sup>2)</sup> 상호 간의

1) 2020년 6월에 나온 김여정의 담화에서 드러난 거친 언사와 함께 실력행사의 우려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통해 일부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를 단순한 교착상태가 아니라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의 적대적 대치상태로의 회귀로 보는 비관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그동안 수많은 위기 국면을 드러내왔고, 또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 왔다. 위기 속에 숨어 있는 기회 구조는 역사의 긴 호흡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공동체’ 구상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과제이다.

2) 황옥자, “고대 아테네 사회의 갈등을 통해 본 공존과 화해.” 통일연구원, 『남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의

설득을 통한 정신의 통합이 공고했던 아테네가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와 미래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갈등과 분열에 매몰되었고,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물리적 결합만을 생각하기보다 과거 아테네 시민들이 중요시했던 정신적인 통합,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과 같이 물리적 분단보다 정신과 마음의 분단이 더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분단에서 통합으로 가는 길에서 정치사상적으로 통일을 생각해보자. 외교협상이나 국제 규약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현실에서 보이는 갈등을 봉합할 수는 있겠지만, 협상, 규약, 지원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시 원래의 갈등, 분란 상태로 돌아가 버린 다수의 역사적 경험을 기억한다면, 어쩌면 과거에 대한 용서와 미래로의 약속을 통한 생각의 변화를 시도해 보는 방법이 더욱 빠른 길인지도 모른다.

국내정치나 국제정치에서 모두 행위자는 인간이기에 인간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의 변화로 귀결된다. 통일은 안전한 미래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리의 과제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하자는 역사적 사명이기도 하다.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공존이 펼쳐질 것이고, 갈등의 세상에서 공존이 자리 잡는 데 필요한 것은 우선적인 화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다양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 찾아낸 화해와 공존의 가능성과 함께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로운 미래공동체 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서양,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화해 사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 연구를 바탕으로 필자는 행위자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존의 조건 형성, 공존과 인정을 통한 평화의 달성, 평화로운 사회에서의 화해의 완성과 공존의 지속이라는 삼각 구도를 통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공동체의 상을 제시해 보고 이와 더불어 이를 위한 우리의 과제도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상: 화해협력』의 위탁연구과제 〈동서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위탁연구기관: 한국정치사상학회, 2019, pp. 31-2.

## II. 화해, 공존, 평화의 순환구조

### 1. 화해의 조건

화해, 공존, 평화의 삼각 구도에 동력을 제공하여 순환적으로 작동하게 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행위자 인간으로, 지구상의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 해결의 단초가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의 조건에 대한 논의가 그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 이래 ‘인간은 정치적이고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는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 앞에 인간들 사이를 규정하는 관계의 조건이 곧 인간 생존의 조건으로 등장하게 된다. 저서 『인간의 조건 The Human Condition』에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를 살아있는 인간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육체를 살아있게 하기 위해 노동이, 정신의 만족을 위해 작업이, 육체와 정신의 교류를 위해 행위가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살아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동하는 삶 ‘비타 악티바(Vita Activa)’는 이렇게 노동, 작업, 행위 3자의 교호작용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건강하게 유지된다.<sup>3)</sup>

아렌트에게 노동과 작업이 ‘나’의 존재 확인을 위한 내면으로의 활동이라면, 행위는 ‘나’를 대외적으로 확인하려는 대외적 활동이다. 내면으로 파고드는 구심력과 외부로 확장하는 원심력의 균형점에 바로 ‘나’의 공간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아렌트의 ‘행위’는 갈등 상황에서 화해를 추구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인간됨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정치적 동물 인간들

3) 이 세 가지는 인간 실존의 일반적인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노동은 개인적 생존뿐만 아니라 종(種)의 삶까지 보장한다. 작업과 그 결과물인 인간의 인공품은 유한한 삶에 영속성과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정치적 조직체를 건설하고 보존하는 데 참여하는 행위는 기억함, 즉, 역사의 조건을 창출한다... 행위는 탄생성의 인간조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행위는 유일한 정치적 활동이기 때문에, 사멸성이 아닌 탄생성이 형이상학적 사상과 구별되는 정치적 사상의 범주가 된다. 한나 아렌트 지음,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2003. p.57.

이 모여 사는 사회의 현장에서 그 개체의 개별성으로 인한 갈등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별적 존재 인간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간단없이 시도하면서 자신이 존재함을 인지한다. 아렌트가 고대 그리스의 시민들에게서 찾아보려 했던 의사소통의 현장이나 허버마스가 역설했던 공론장은 21세기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 공론장은 개별적이고 주관적 존재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객관화, 일반화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공론장에서 우리는 내 주장에다 동의와 함께 반대하는 아우성까지 뒤섞인 타인의 합성을 듣게 되고, 우리의 주관적 사고체계는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내 안에 타인의 소리를 담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관적 존재 인간이 객관성을 담보할 가능성을 얻게 되고, 주관적 존재가 객관적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매우 역설적 상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떠한 치명적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화해는 가능하다.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화해가 가능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육체의 상처가 드러나면서 치유가 시작되는 것처럼, 사회의 갈등도, 인간 내면의 갈등도 그 깊은 상처의 골을 드러내면서 사회적 치유의 과정은 시작된다. 여기서 언급된 사회적 치유가 바로 화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절차와 과정이 있듯이, 사회에서 형성된 갈등이라는 질병이 치유되는 과정, 즉, 화해의 과정에도 절차와 전략이 필요하다. 치료하겠다는 마음만 앞서게 되면서, 오히려 각 행위자의 상처를 건드려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사례는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화해는 갈등을 전제하고 있기에,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상대의 마음을 살피면서 서서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계심은 상호 협력을 통해 완화될 수 있지만, 경계심으로 협력은 지연되기 십상이다. 상대에 대한 경계심의 완화가 협력을 위한 선결 작업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상대에게 일단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과 같이 있기, 들어주기, 말하기 등의 심리학적 접근방법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존재를 공유하고, 대화와 청취를 통한 의사소통이 시작되면서 서로에게 상대를 향한 활동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사소한 것에서 중요한 것으로, 작은 일에서 큰 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스며들어 가면서 상호적으로 서로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알아가고 얻어낼 수 있게 되면, 이제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갈등의 해결과 대립의 해소는 화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화해를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협력이 형성되는 과정이 바로 화해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상호 공존의 가능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즉, 화해의 조건은 협력이고, 화해는 공존의 조건이 된다. 이와 같은 화해이론은 아렌트에게서 명확히 드러난다. “아렌트에 따르면 정치적 공간에 참여할 수 있을 때만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시현할 수 있고, 따라서 자유로운 개인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정치공동체의 형성과 유지가 바로 진정한 화해의 본질적 조건으로서 화해의 과정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정치의 장에서만 인간의 다원성은 드러나고 인간 존재의 본질인 자유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기에, 건강한 정치 공간의 유지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화를 완화하거나 해소시키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아렌트의 이론에서 화해란 다양한 정체성과 차이가 자유롭고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서 시민적 우정을 쌓아가는 한편 정치를 통해 과거의 갈등과 부정의를 치유해가는 끊임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sup>4)</sup> 동일한 정치공간에서의 공존이 화해에서 평화로 가는 길목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2. 공존의 조건

화해에서 평화로 이어가기 위한 공존의 필요성은 동서양의 사상과 역사 어디에서나 발견된다. 덕과 예를 정치의 목표로 설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로운

4) 김비환, “한나 아렌트의 ‘정치적 화해’ 이론.” 통일연구원, 2019, pp. 71-72.

정치의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유가의 경전 속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과 구동존이(求同存異)는 화해와 공존의 조건과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동양사상에서 발견되는 화이부동과 구동존이는 인(仁)과 화(和)를 중심으로 하는 유가 사상의 실천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함께 공존하는 법이라고 인(仁)을 설명한다. 인에서 발견되는 상호적 사랑은 기본적으로 관계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인간성의 본질로부터 기인한다. 여기서 출발한 화이부동은 전체라는 구도에서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통의 이익을 존중한다는 조건하에서 개별 이익에 대한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 구동존이는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승인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같음을 구하는 작업으로서, 다름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며,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이렇게 볼 때 화이부동과 구동존이는 다양한 주체들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화해의 전제조건이자 공존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등의 현장에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남과 대화, 협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도의 상승이다.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교차하는 이해관계의 얽혀있는 구도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얽혀있는 구도의 존재는 얽힘을 풀기 위한 공동작업의 필요성을 서로에게 인지하게 한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상호 인정의 미학은 인간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은 없다는 믿음을 서로에게 심어준다. 아무도 풀 수 없었다는 고디안의 매듭(Gordian Knot)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해결되었다.<sup>6)</sup> 갈등의 존재는 해결을 요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든 수단에 열려있을 필요가 있다. 과거에 얽여있는 사고체계에

5) 안외순, “유교정치사상에 나타난 화해 개념과 전통.” 통일연구원, 2019, pp. 98-102.

6) 고대 소아시아에 있던 프리기아의 왕 고르디아스(Gordias)가 신전 기둥에 묶어 놓았다는 고디안의 매듭(Gordian Knot) 전설에 따르면 그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 전체를 지배할 것이라 했다. 오랜 세월 아무도 풀지 못해 절대로 풀 수 없다고 알려진 고디안의 매듭을 알렉산드로스는 칼로 잘라냈다고 한다. 풀어야 한다는데 집중하다보니 수백 년간 풀지 못한 것이다. 알렉산드로스는 그것을 잘라냄으로써 해결한 것이다. 여기에 세상의 모든 난제(難題)에 대한 창의적 접근방식의 가능성이 있다.

대한 전향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던 역사적 대타협과 화해를 가능하게 했던 역사의 기록은 많다. 이 모든 사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상호 간의 신뢰이다. 신뢰가 없으면 접근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으면 대화도 어려워진다. 대화가 어려워지면, 만나지 않게 되고, 만남의 소실은 결국 협력을 통한 화해의 가능성도 사라지게 한다.

상호 간에 대한 신뢰가 협력도, 화해도 가능하게 하고, 공존의 조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적으로 쌓여 형성되는 감정의 상태이지만, 신뢰의 여부에 따라 만남, 대화, 협력의 길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상호불신의 늪은 모든 대화의 단절자 역할을 하게 되고, 상대의 모든 행위에 의심을 품게 한다. 일종의 악순환 구조이지만, 현존하는 깊은 갈등의 골에서, 상호불신의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 또한 현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다. 불신으로 만남을 통한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 신뢰 회복의 방법은 인내와 지속성이다. 불신한다고 해서, 만남과 대화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위를 멈춘다면 신전 기둥에 매여져 있던 고디안의 매듭처럼 역사는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 풀 수 없으니 매여 있고, 매여 있으니 풀 수 없다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고대의 알렉산더처럼 누군가 언젠가 끊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과거 악순환의 고리를 푸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전향적 태도를 통해, 과거 문제의 해결이 아직 미진해도 만남의 핑계와 대화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제시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남과 대화에서 이어지는 협력과 화해의 과정은 자신들만의 구도와 사고에 빠져있던 당사자의 일방성에 변화를 가져온다. 다변화된 접근은 상대에게 쌍방향의 사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넣고, 분열된 사회에서 통합적 정책 이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한다. 화해가 공존으로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다. 화해의 과정이 공존의 조건이라고 할 때, 이는 결국 상대에 대한 인정을 통해 가능한 것이며 타인에 대한 이해가 그 필수요소가 된다. 공존의 조건이 화해이고, 공존을 통해 평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

다는 측면에서, 공존은 이제 평화의 조건으로 등장하게 된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화해에서 공존으로 가는 과정을 찾아보는 작업도 매우 중요한데, 화해의 과정을 거쳐 공존과 평화의 가능성을 조선 건국 초기 사회 통합의 시도에서 찾아보는 연구도 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14-5세기 권력의 이양기에 나타난 대일통 사상은 단순히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건국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교체기에 새로운 정치세력이 기존의 정치세력과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통합된 정치 질서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sup>7)</sup>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변화는 현대적 관점으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라기보다는 정권의 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정권은 변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공간에서 살아 가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기에, 화해와 공존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모든 정권의 교체기뿐만 아니라 혁명기에도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등장한다. 과거에 관한 연구는 미래로 가는 길을 예비한다. 혁명기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 통합의 과정에서 기존의 고려 정치세력과 어떻게 화해하고,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형성해 나갔는지에 대한 14세기적 논의 속에 21세기 대한민국의 당면과제인 공존에서 평화로 가는 삶의 지속가능성이 투영되고 있다.

### 3. 평화의 조건

닫혀있던 인적, 물적 교류의 장이 열리면 서로의 만남이 빈번해지면서 화해를 논의하는 담론이 활성화된다. 활성화되는 화해의 결과는 상호 간 존재에 대한 인정이며, 이는 상호 공존의 지속성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공존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는 전쟁과 갈등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제로 작동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간 사회 모든 곳에 상존하는 갈등과

7) 이하경, “조선의 건국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조선시대 화해사상.” 통일연구원, 2019, pp. 109-125.

대립, 반목의 해결방식에서 인명 살상을 유발하는 무력사용이 배제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최후의 수단으로 유보될 수는 있게 된다. 침예한 갈등의 상황에서 무력시위나 공격이 아니라, 제도를 통한 대화로 풀어나가는 상황의 지속을 우리는 평화라고 부른다. 단순히 무력행사가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와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2011년 노르웨이의 우퇴이아 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폭력에 대한 비폭력적 대응의 가능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세계 여론은 노르웨이의 대응에 주목했지만, 노르웨이 총리의 다음과 같은 말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폭력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민주주의와 개방성, 정치참여를 더 늘리는 것”이다.<sup>8)</sup> 미국의 9.11 테러에 대한 반응을 이미 목도한 바 있던 당시 세계는 개방사회의 표상이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의 국가 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되리라는 예상을 한 바 있지만, 노르웨이는 그렇게 가지 않았고, 범인만을 처리하고 복수혈전이나 사회적 유흥극 없이 마무리되었다.<sup>9)</sup> 여기서 평화의 조건은 공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형성된 평화는 또다시 화해의 조건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화해가 공존의 조건이 되면, 공존은 평화의 조건이 되고, 평화는 이제 다시 화해의 조건이 되는 선 순환적 삼각 구도의 모습이 열린사회를 표방하면서, 폭력과 테러에 맞서 민주주의와 개방성, 정치참여를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는 북유럽적 발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갈등과 대립, 반목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방치가 아니라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사회적 이슈들이었다.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전쟁의 목적이 평화였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역설도 존재했던 것이 인간의 역사임을 인지할 때, 평화 또한 깨지기 쉬운 그릇이자 잘 관리해야 하는 나무인 것은 민주

8) 최민용, “‘오슬로 참극’ 노르웨이의 관용, 9.11 미국과 달랐다.” 『경향신문』 2011년 7월 30일.

9)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반응은 일정 부분 국가의 폐쇄와 적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었다. 열린사회 미국이 테러와 그 이후의 공포로 인해 닫혀버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 공격으로 21세기는 전쟁으로 문을 열었다. 테러를 차단하고, 악을 소멸시키겠다는 기치를 내세운 전쟁은 여전히 중동 각 지역에서 복수혈전과 폭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주의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민주주의는 힘을 동원한 폭력으로 점철되던 사회에 평화를 가져다주었다. 권력투쟁 방식을 제도화시킴으로써 합법적으로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게 되면서 민주주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로운 사회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는 과정이자 절차이다. 절차와 제도에 대한 신뢰에 흠결이 존재하고, 결함이 생길 때,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언제나 위기에 봉착했음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보아도 자명하게 드러난다. 권력의 투쟁을 합법적 수준으로 올려놓은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결과 21세기에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0)</sup> 국내에서의 개인적 폭력과 무력의 사용이 법과 절차에 따라 제도화되면서 국내에서의 정치적 평화를 달성한 경험을 통해서 국가 간 관계에서도 은유적으로 차용될 수 있는 사례임이 분명하다.

위에서 평화는 목적이고 민주주의는 절차라 할 수 있지만, 또한 평화와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과정이자 목적일 수도 있다는데 천착한다면, 목적과 방법의 합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으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적으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민주주의를 이룩해낸 인류의 경험에서 그 근거를 발견한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2001년의 미국과 2011년의 노르웨이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도 많이 다르다. 무엇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개방성의 유지와 평화로움의 정도, 테러와 무력에 대한 공포의 존재 등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법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목적이 일상의 민주주의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평화라는 목적도 일상의 평화를 통해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민주적으로 민주주의하기’와 마찬가지로, ‘평화적으로 평화하기’는 단순한 말의 유희가 아닌 우리

10) 세습을 통한 일인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도 공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가 당연한 현실이고, 우리가 이뤄내야 할 미래인 것이다. 결국, 화해를 통해 형성되는 공존이 지속되면 평화 상태가 도래하게 되고, 평화의 지속은 또한 다시 만남과 인정으로 이어져 화해와 공존, 평화라는 삼각 구도는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즉 인간이다.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타개해 나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는 다른 미래일지 결정될 것이다. 전쟁과 테러의 무한 공포가 반복되는 시대로 이행하든지, 아니면 화해와 공존을 통한 평화의 시대로 들어가든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갈등, 대립, 전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화해, 공존, 평화라는 선순환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21세기 갈등과 대립의 현장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역사적 소명인 것이다.

각각 역사에서 일정 기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곳에서 내부적 갈등으로 전쟁을 겪었던 지역으로서 1860년대 중반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죽은 자에 대한 추모가 통합되어 가는 과정과, 1989년 통일 이후 독일의 정의 실현에 대한 욕구와 통합의 당위성이라는 모순적이지만 당위적 상황은 앞에서 언급한 화해, 공존, 평화의 순환 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드러낸다.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가 가지는 사회통합적 기능과 그 과정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스페인과의 전쟁 승리를 계기로 동력을 얻은 매킨리 대통령의 국가 통합 프로젝트는 남부의 죽은 자 문제에 정면으로 접근하면서 정점에 도달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알링턴 국립묘지는 남부의 사자(死者)들을 받아들이는 최초의 공식적 장소가 되고 국가 통합을 향한 상징성의 공간으로 정립되었다. 1901년 알링턴 국립묘지는 남부에 대한 적대적 이념과 열정으로 응축된 장소에서 지역적 화해와 통합의 터전으로 탈바꿈했다.”<sup>11)</sup>

1900년을 전후하여 미국이 죽은 자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갈등에서 통합으로 전환되었던 사례를 보여준다면, 1989년 이후 독일은 정의와 통합의 당대적

11) 허상복, “내전기 미국의 전사자, 갈등에서 화해의 존재로.” 통일연구원, 2019, pp. 182-184.

시현이라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여, 기록을 통해 용서와 약속을 치환하면서 갈등과 대립이라는 현실을 치유해 나간다. 1989년 독일이 통일 이후의 통합과정에서 화해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통일 이후 정의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 독일 정부는 정치적 화해를 추진한다. 정치적 화해는 상대를 포용하는 화해와 함께 정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당대적 정의 집행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분열양상과 화해만 강조했을 때 예상되는 피해자 집단과 일반 시민의 좌절감이라는 딜레마 상황에서 독일은 과거에 대한 기록이라는 정치적 화해의 길을 찾았다.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를 공동체적 역사 속에 각인하는 방법을 통해 정치적 의미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과거에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통한 현재적 의미의 징치를 통해 미래에 그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양면적인 정치적 결단이었던 셈이다.”<sup>12)</sup>

이러한 방식은 풀 수 없었다던 고디안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렸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과거로부터 현재의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정의 구현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또 다른 폭력이 복수로 이해되면서 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던 수많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독일은 용서와 약속이라는 아렌트적 방법을 현실에 적용하여 과거의 족쇄로부터 놓여날 수 있었다. “아렌트는 인간 공동체가 과거의 불행, 잘못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용서와 약속을 제시했다. 용서를 통해 인간은 과거의 적대와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용서한 상대와 함께 약속을 함으로써, 미래에는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sup>13)</sup>

과거에 묶인 현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으며, 현재 속에서 과거를 무한 반복하며 살아갈 뿐이다. 갈등과 대립의 현장에서 어두운 과거로부터 벗어나 밝

12) 표광민, “통일 이후 독일의 화해 사상: 정의와 화해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9, pp. 198-200.

13) 표광민, 위의 글, p. 204.

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현재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20세기 초입의 미국과 20세기 말의 독일은 잘 보여주고 있다. 199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보고서는, 여러 가지 비판<sup>14)</sup>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남아프리카의 평화적인 민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20세기는 갈등이 증폭되어 재난적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또한 갈등 속에서도 화해가 이루어져 상호 공존의 상황 속에서 평화로운 사회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 Ⅲ.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민주주의의 역할

21세기까지 남아있는 이념 갈등과 대립의 현장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의 교차로에 서 있다는 것과 같다. 기술적으로는 5G를 통한 초연결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과 직접적인 서신 연락도 상호교통도 자유롭지 못한 매우 원시적 단계에 있다는 역설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 미래구상 모두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이다.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해방 직후 대한민국은 좌우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충돌하는 갈등의 현장이었다. 양쪽으로 갈라진 사회는 정의로부터 멀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대한민국 사회는 좌우로 갈라지고, 결국 국토마저 분단되었고 1950년부터 3년 동안 전쟁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정전협정 이후 남북 양측은 상호 간에 영구분단 세력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분단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체제 대결을 이어왔다. 2000년의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북 간에 대화가 간간히 이어지기도 하였지만, 북한은

14)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인권유린을 조사하고 정치적 폭력의 희생자와 범인들의 증인을 청취하고 이들의 사면을 검토하였고, 희생자들의 복권을 위해 노력하였다. 해당 위원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도 있지만, '화해'에 치중한 나머지 '정의'가 밀려났다는 비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군정치를 앞세우고 핵무기 개발을 통해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국제사회의 공적(公敵)으로 지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1년 김정일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김정은 정권은 핵 무력 완성과 동시에 경제력 상승에 대한 욕망을 보이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에도 남북화해 협력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권이 2017년에 등장하게 되면서 남북관계의 변곡점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회담이 진행되었고, 3차 북미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sup>15)</sup> 이와 같이 통일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 환호하는 의견도 있지만, 남북관계의 이러한 진전에 대해 반발과 도전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의 전쟁과 폭력 사태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정권을 상대로 한 평화공세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평가절하에 이유가 없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야 하지만, 과거의 희생자들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가해자는 가해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도 또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1945년 이후 해방정국에서 등장한 안재홍과 조소앙 등 중도파의 정신과 활동은 화해, 협력을 통한 공존과 평화의 달성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살펴볼 만한 내용으로 이들의 중도적 사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재홍의 ‘다사리’관과 조소앙의 ‘삼균주의’가 가지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평가이다. 참여한 갈등의 해방정국에서 제시된 ‘다사리’는 안재홍이 제시한 화해와 평화의 방법론으로서 모두 같이 살아보자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즉, ‘다사리’는 “국민총원을 다 살린다는 진생 혹은 항존케 하는 공영국가” 건설에 목적을 두고 “만민총언이라는 국민주권 사

15) 이 글이 작성된 2019년 이후 북미 관계의 진척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북한은 1년여 동안 절제된 듯 냉담한 반응을 보이더니, 2020년 6월 급작스럽게 남북의 평화적 관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향후 무력시위까지 언급하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미국은 코로나 19의 혼란 속에서 대선정국으로 들어가, 북미회담 논의는 교착상태를 지나 수년전의 대치상태로 후퇴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과 언론의 자유, 만민공생이라는 공동체적 정의를 기본가치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으로 도출된 것이다.” 안재홍의 다사리주의의 구체적 방법론은 조소앙의 삼균론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삼균이란 ‘지력을 고르게 하고, 부력을 고르게 하고, 권력을 고르게 하는 것’이라 규정하면서, 안재홍은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 등 정치평등과 경제균등의 양자를 횡적이요 또 공간적으로 병행 쌍진하되, 다시 교화의 평등 즉 지력의 평등으로써 배합하는 것”임을 강조한다.<sup>16)</sup> 즉, 안재홍의 삼균주의는 권력문제에 그치지 않고 재산과 토지의 균등까지 요청하는 점에서 매우 진보적인 제도이자 주의이고, 조소앙이 제시한 보편적 균등화는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균등이 실현되는 지점에서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의미에서 민주 공화정으로 이어진다. 바로 여기서 좋은 정치라는 이상이 구현되는 현실의 장(즉, 민주주의 체제)에서 화해와 공존에서 평화로 이어지는 삼각 구도가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음이 명백해진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 건강한 정치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고대의 플라톤부터 마키아벨리를 거쳐 현대의 아렌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양정치사상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이고, 동양정치사상과 한국정치사상에서도 건강한 정치공동체란 포기할 수 없는 인간 사회의 이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진정한 정치공동체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공공성의 정립과 공적 가치의 확립이라는데 이 모든 사상적 담론의 핵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존중하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화해, 공존, 평화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선 순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가 여전히 그 가치를 발한다. 건전하고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시민을 행위자로 하는 민주주의는 17,8세기 시민혁명을 거쳐 시민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19, 20세기의 이념대결의 장이라는 파고를 넘어 21세기에는 전 세계적 정치체제로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16) 윤대식, “중도의 경계 위에 화해를 추구한 지성들: 안재홍과 조소앙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9, pp. 149-152.

물론 민주주의 사회가 언제나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역사는 20세기를 전쟁의 세기로 기록한다. 세계대전이 두 번이나 발생했고,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이데올로기 대결 구도 속에서 지역별로 수많은 전쟁이 지속되었다. 1990년대 극적으로 탈냉전이 이루어지면서 10여 년간 전쟁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잦아든 듯도 하였으나, 2001년 9.11테러는 또다시 세계를 대결 구도와 전쟁, 폭력으로 얼룩지게 하였다. 전쟁으로 시작된 21세기를 전쟁으로 마무리하지 않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고, 남북의 교착상태 해결이 보다 먼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우리의 현재적이고 구체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는 상호간의 평화공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체계이기에 핵 무력을 비롯한 인명 살상용 무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응수단이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결정이 오랜 기간 지연되기도 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사회가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개연성이 가장 높은 정치체제이다.<sup>17)</sup>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는 어렵지만, 일단 모아지게 된다면 매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IV. 한반도에서의 평화로운 통일 공동체 구상

현재 한반도의 대결 구도 향방의 미래도 궁극적으로는 행위자 인간의 손에

17)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 *Democracy in America*』(제2권 3부 24장)에서 민주주의란 전쟁을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시작한 전쟁을 끝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개인의 의견이 중요시되면서 의사결정과정의 지남함에 대한 설명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역설적 힘을 유추해볼 수 있다.

민주주의가 가지는 힘은 사회주의 전략의 역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20세기 초반 혁명이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공산주의가 방법론 논쟁을 통해 정통공산주의와 수정주의로 분화된 것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힘을 인정한 자들이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설득과 대화, 타협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제도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의 전환은 사회민주주의로 정립되면서 복지 국가 유럽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달려있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남북은 현재 국제법적으로 정전(停戰)상태 하에 있다. 한국전쟁을 마무리한 1953년의 정전협정이 우리 앞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규약이다. 정전은 전투행위의 정지를 의미할 뿐, 평화라고 보지는 않는다. 무력 사용의 부재를 평화라고 보는 소극적 평화 개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은 평화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무력 사용 가능성의 부재까지 포함한 적극적 평화 개념을 적용하자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전쟁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상의 단초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한반도 주변국들과 관련되는 모든 전문가의 공통된 생각이다. 1년여 년 전부터 시작된 남북관계 전환의 가능성이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고 전환의 방법에 대한 견해차가 크기는 하지만, 일단 정전에서 평화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여기가 바로 출발선이다.

상호 간에 밀고 당기는 협상의 지지부진함이야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협상자들의 기본적 자세이기에, 갈등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인내와 소통임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른 상태에서, 그 이익을 맞추어나가는 것을 외교라고 할 때, 이미 대한민국의 상대 북한은 외교라인 안에 들어서 있는 셈이다.<sup>18)</sup> 아직 전쟁무기 실험에 대한 끈을 놓지는 않고 있으나,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변화를 위해, 미래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북한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선에 북한 정권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기까지 60년 이상이 걸렸지만, 일단 시작된 외교 방식의 변화를 되돌리기에는 북한도 현재 자본주의 사회가 가진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전의 무력시위는 무력 그 자체에 방점이 있었다면, 현재의 무력시위는 외교협상을 추동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이중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무기가 목적이라기보

18) 급변한 현재의 상황은 이미 각주 2)와 9)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현재 북한의 강공책의 전면에는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김여정이 나서고 있다. 현재 북한의 최고 결정권자인 김정은이 전면에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관측과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다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최근 수년간에 발생한 북한 외교 전략의 변화에서 읽어낼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 변화의 가능성 있다.

심리학이나 사회학, 국제정치학에서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sy)’라는 말이 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의 옛말이나 ‘믿는 대로 되리라’라는 종교 경전의 말처럼, 인간이 행위자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행위자 인간의 인식 방향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19)</sup> 외교협상 전략과 무력시위를 동시에 진행하는 상대를 두고, 우리도 또한 양면적으로 준비할 필요는 있다. 다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 수단이 되고 있는 무기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강경 대응도 때로는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소통의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민주주의 사회가 가지는 자유로운 소통의 이점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상대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화해에 대한 아렌트의 분석에서, 아렌트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공적 공간의 형성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해를 진행하기 위한 안정된 정치 공간 내에서야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민주적인 공적 공간의 제도화 및 공고화 자체가 화해의 한 가지 양상이자 보다 실질적인 화해를 위한 공간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 내부 및 남북한 통합의 제도적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0)</sup> 이는 곧, 내부적으로 자유의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하고, 외부적으로는 한반도 주변 여러 당사자 간 대화의 통로 확보와 유지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기존 통일전선 전략의 수정과 국제사회로의 전면적 진입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변화된 계산법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같은 민족으로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된 여타 인접 국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즉각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잘 드러

19) 국제정치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한 국가의 지도자가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국제정치에서 인식과 오인으로 인한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20) 김비환, “한나 아렌트의 ‘정치적 화해’ 이론.” 통일연구원, 2019, p. 80.

나지 않는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역사의 소명을 따르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통한 내부적 통합, 안정된 정치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상호간의 신뢰 형성 등이다. 민주적 정치 공간과 정치문화는 공적 공간의 안정된 유지를 통해 형성된 상호신뢰가 사회적 합의 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선결 요건인 셈이다. 나아가 양극단으로 치우친 이념적 대결 구도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중도세력의 성장에서 이어지는 중간지대 형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풍토에서 사라져 버린 듯한 중도세력의 흔적을 찾고 되살려내어 현재에 뿌리내릴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수만 있다면, 극단적 대립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현장에서 그리고 남과 북의 대결 현장에서 정상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평화로운 정치 공간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즉, 상대방과의 화해, 합의 도출에 앞서, 내부적 결속과 화해, 합의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야 남북한의 적대적 구조가 평화적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것임을 의미한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의 정립과 건전한 중도세력을 통해 평화롭게 재편된 정치공동체의 형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조화롭게 자리 잡을 때, 한반도에 화해와 공존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미래는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V. 통일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과제

목표가 설정되고 계획이나 방법이 정립된 모든 경우에 있어, 다음의 중요한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앞 절에서 언급된 우리는 누구인가? 모든 제안이나 모든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행위자의 문제

이다.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정치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기에, 분단의 복귀인 통일도 국제정치적 논의가 그 시작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분단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치적 통일이 70여 년의 분단 상황을 제대로 복구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한반도에서 통일의 문제는 국제정치적 문제를 넘어 국내정치의 문제로, 정치의 문제를 넘어 사회와 문화의 문제로 확대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통일 공동체 형성을 위해, 물리적 경계의 통일을 넘어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 내부의 대립까지도 우리는 넘어서야 한다. 여기서 행위자는 정부조직이나 단체와 함께 대한민국 시민 개개인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정신과 문화는 공동체 구성원의 가슴과 머릿속에 형성되는 것이기에, 불가역적인 평화의 통일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작업이다. 한반도가 통일로 가는 길에서 그 주체에 바로 우리, 즉 대한민국의 시민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분단된 국토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나뉘어 있는 마음과 정신의 화해와 공존, 그리고 통합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좌우 이념의 극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부터 적대감의 극복을 통한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14세기 말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권력 이양기의 대일통사상, 1945년 이후 좌우가 대결하던 한반도의 해방정국에서 나타난 중도파의 사상과 정책대안, 1865년 남북전쟁이라는 극렬한 투쟁과 대립 이후 갈등과 상처의 치유 현상이 된 1900년 이후의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가 보여준 죽은 자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살아있는 자들의 통합, 1989년 독일의 통일 이후 당사자 처벌이라는 ‘현재적 정치’를 넘어 기록을 통한 용서를 통해 ‘미래의 기억’이라는 방법에 합의한 독일 등의 사례는 정치의 존재 이유를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들에게 제시한다.

극한 대립으로 맞서 있는 곳에 정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자기만의 정의를 외치는 곳에 공정한 사회는 다가설 수 없다. 자신만의 의를 부르짖고, 승리만을 목표로 삼는 곳에 정치가 사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몰락하던 시기의 민주 선동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현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민주적 선거로 당선된 히틀러 등 파시스트들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 나라 시민, 즉 유권자의 수준이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에서, 시민이 정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력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사회 안정과 통합은 시민의 화해와 공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시민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통합과 평화의 시대로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자명해진다.

우리는 홍익인간이라는 가치와 함께, 화이부동, 구동존이라는 유가의 이념도 오랫동안 지켜내야 할 공동체의 가치로서 논의해 왔다. 여말선초의 대일통사상도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노력의 결과인 셈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갈등과 대립이 넘쳐나는 현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IT 산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on-line) 기법의 발달로 개별 시민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확보되었고, 플래시 몹(flash mob) 등과 같이 다양한 집회 형태가 자리 잡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를 거쳐 직접민주주의로까지 향하고 있다. 시민들은 다양한 참여와 집회에 익숙해지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이 이미 시작되었다.<sup>21)</sup> 현재로서는 침체화된 갈등의 존재가 사회의 분열을 가속화, 또는 영속화할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화해, 타협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요구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내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에게도, 어느 집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천착하고, 승패가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가 문제라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게 될 것이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국내적 갈등에 대한 타협이나 합의에 대한 경험은 통일

21) 2019년 말부터 시작되어 2020년 전반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비대면사회, 즉 언택트(untact) 사회가 반강제적으로 앞당겨지면서, 집단보다는 개인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첨단 IT 기기의 발달과 함께 개인이 별도의 공간에 존재하면서 집단의 역할을 수행해내고 추상적 공동체를 형성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21세기의 민주주의는 국가와 함께 개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문제 해결의 경험 축적이 라는 차원에서 대외적 통일 논의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성의 등장은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킬 수도 있지만, 역으로 해결의 경우의 수를 확대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로운 미래 통일 공동체를 위해 시민으로서의 각 개인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갈등과 대립의 현장에서 이익의 양보와 조화, 상호 대화와 타협, 협력을 통해 화해의 여지를 높이고, 협력의 지속과 화해에서 이어지는 상호 공존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신호에 반응하면서,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인정과 교류, 상호 이해를 통한 평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가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민주 시민의 존재는 궁극적 사회통합과 평화로운 미래공동체로 가는 길목에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라 볼 수 있기에, 이들을 통해 형성된 국내적 민주주의 평화공동체는,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등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 정부 단위의 협상과 병행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 공존을 통해 미래형 통일 공동체 형성으로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요한, 갈등 지음, 이재봉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도서출판 들녘, 2000.
- 김비환, “한나 아렌트의 ‘정치적 화해’ 이론,” 통일연구원, 2019.
- 아르노, 그룬 지음, 조봉애 옮김, 『평화는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서울: 창해, 2012
- 대천덕 지음, 벤 토레이 엮음, 『대천덕 신부의 통일을 위한 코이노니아』, 서울: 홍성사, 2015.
- 런치, 제이크 지음, 김동진 옮김, 『평화 저널리즘』,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6.
- 박의경, 『민주주의 사회와 전쟁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
- 박의경, “소프트 파워의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문화와 국제정치>. 『세계정치 7』 제28집 1호, 2007.
- \_\_\_\_\_, “전쟁의 길과 평화의 나무.” 『국제정치논총』 제53집 4호, 2013.
- \_\_\_\_\_,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제언.” 『국제정치논총』 제54집 4호, 2014.
- 사회와 철학 연구회 지음, 『한반도의 분단, 평화, 통일 그리고 민족』, 서울: 씨아이알, 2019.
- 아렌트, 한나 지음,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2003.
- 아렌트, 한나 지음, 이진우·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서울: 한길사, 2017.
- 아세파, 히즈키아스 지음, 이재영 옮김,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Korea Anabaptist Press, 2014.
- 안외순, “유교정치사상에 나타난 화해 개념과 전통.” 통일연구원, 2019.
- 윤대식, “중도의 경계 위에 화해를 추구한 지성들: 안재홍과 조소앙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9.
- 이하경, “조선의 건국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조선시대 화해사상.” 통일연구원, 2019.
- 전우택 편,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 정주진 지음, 『평화 이야기』, 서울: 다자인, 2018.
- 조진성 지음, 『분단과 여성』,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진희관 외 지음,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서울: 박영사, 2019.
- 최해광 지음, 『독일통일, 더 큰 대한민국의 통일철학을 말하다』, 서울: 마인드맵, 2017.
- 타지박시, 체노이 지음, 박균열 외 옮김, 『인간안보』,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0.
- 토크빌, 알렉시스 드 지음, 박지동외 옮김, 『미국의 민주주의』, 서울: 한길사, 2013.
- 파머, 파커 지음, 김찬호 옮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서울: 글항아리, 2012.
- 표광민, “통일이후 독일의 화해사상: 정의와 화해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9.
- 통일연구원, 『남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1/5년차): 화해협력』, 2019. 위탁연구과제  
 <동서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미래> (한국정치사상학회)
- 하상복, “내전기 미국의 전사자, 갈등에서 화해의 존재로.” 통일연구원, 2019.
- 황옥자, “고대 아테네 사회의 갈등을 통해 본 공존과 화해.” 통일연구원, 2019.

-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최민용, “‘오슬로 참극’ 노르웨이의 관용, 9.11 미국과 달랐다.” 『경향신문』, 2011년 7월 26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10726220511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107262205115)(검색일:2011.7.30.).

Abstract

Conditions for Reconciliation, Co-existence, and Peace:  
Toward a Peaceful Community in Korean Peninsular

Euikyung Park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ultimately focuses on the project for peaceful community in Korean peninsular with the possibility for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traced from the various situations and histories. On the basis of the detailed professional studies on the topic of reconciliation for all times and places, I will vision the unified Korea in peace with a triangular structure of reconciliation, coexistence and peace. It works this way: When reconciliation makes coexistence possible, coexistence makes the road to peace. Then, peace can make reconciliation go on to the other stages. Also, I would like to present what we have to do for this process.

Keywords: Reconciliation, Coexistence, Peace, Cooperation, Recognition

투고일: 2020년 6월 23일, 심사일: 2020년 7월 23일,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20일